

2024년 미국 민주당 정강 분석을 통한 해리스 후보의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 조망

에너지국제기구협력실 유학식 연구위원(hsyoo7@keei.re.kr)

- ▶ 민주당의 정강은 현 행정부와 차기 행정부 모두에 걸쳐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책을 담고 있는 실적보고서이자 청사진으로서, 차기 대통령 후보이면서 현 바이든 행정부의 부통령인 해리스 후보의 기후·에너지 정책은 본질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차별화되지 않음.
- ▶ 특히, 바이든 현 행정부의 핵심적인 기후·에너지 정책들이 이미 차기 행정부 시기까지도 포함하는 시계(時界)에서 추진되고 있어 해리스 후보의 정책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연속선 상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민주당 정강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음.
- ▶ 민주당 정강을 통해서 본 해리스 후보의 기후·에너지 정책은 우선 미국 내 에너지 생산의 확대, 에너지 독립, 에너지 가격 안정의 핵심 수단으로서 청정에너지 생산과 보급 확대, 전력망 확충, 청정에너지 제조업 투자,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추구하며, 특히 유권자에게 소구(訴求)할 수 있는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강조함.
- ▶ 또한, 차량 연비기준 강화, 공공부문 전기차 보급확대, 공공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철강·시멘트 등 난감축 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등 수송·건물·산업부문의 탈탄소화를 추구함.
- ▶ 한편 취임 직후 파리협정에 재가입하며 글로벌 기후 리더십 회복에 노력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이어 해리스 후보 또한 향후 글로벌 기후협상 등 기후정책 논의를 계속해서 주도하고, 글로벌 기후금융 및 다자개발금융에의 영향력 행사, 혁신적 금융 기법 등을 동원하여 개도국 기후 대응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됨.

1. 2024년 미국 민주당 정강과 기후·에너지 정책

■ 「2024 미국 민주당 정강」(‘24 Democratic Party Platform) 채택

- 2024년 8월 19일, 미국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2024 미국 민주당 정강」을 채택하였음.
 - 정강은 경제, 외교, 산업, 기후·에너지, 보건, 교육, 총기규제, 이민정책 등 사실상 모든 분야의 민주당의 정책방향을 담고 있음.
 - 따라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해리스 민주당 후보의 에너지정책 또한 민주당의 정강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

“2024년 민주당 정강을 통해 해리스 후보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확인 가능”

■ 민주당 정강과 기후·에너지 정책

- 정강은 9개의 장(章, Chapter)으로 구성되며, 그중 제4장이 기후·에너지정책을 다룸.
 - 제4장은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 비용 절감, 에너지 독립 확보”(Tackling the Climate Crisis, Lowering Energy Cost, & Securing Energy Independence)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음.
 - 현재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에너지 정책을 기후정책과 완전히 분리해서 다루지 않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후보 시절부터 ‘에너지’라는 용어보다 ‘기후’라는 용어를 오히려 더 내세웠음.

- 정강 제4장에서 기후, 에너지, 환경정책을 모두 다루고 있으며, 주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성과, 앞으로의 민주당의 정책 방향으로 구성되며, 일부분 트럼프 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포함함.
 - 민주당은 의회 입법을 통해 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을 신설하거나 개정하고, 행정부 요직에 임명되어 정책을 지원하고 집행에 참여하며,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수반을 함께 구성하고 있는 현직 부통령으로서 해리스 후보의 그간의 활동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고 함께 이룬 것으로 간주하고 정강을 해석하여도 무리는 없음.
 - 이하에서는 2024년 정강 제4장에서 특히 에너지 정책과 기후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내용을 중심으로 정강의 서술 순서를 따르되, 주석과 해설을 통해 정리하고자 함.

2. 청정에너지 생산 확대와 전력망 확충

■ 현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성과

“청정에너지 투자와 생산을 확대하고, 전력망을 확충하여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비용 절감”

- 청정에너지 투자 및 생산 증대
 -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 투자”(Investing in America)¹⁾ 아젠다에 따라 민간 부문에서만 청정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제조에 4천 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사상 최대의 청정에너지 투자 성과를 이루었음.
 - 현재 미국 전역에서 585개의 청정에너지 신규 제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특히, IRA(인플레이션감축법) 통과 이후 투자의 약 81%가 저소득 지역에 이루어짐.
 - 민간 부문 태양광 모듈 투자용량만 해도 1,8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며, 연방 해역에서 최초로 9개의 상업용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승인되었음.
- 에너지 저장 및 전력망 현대화
 - 안정적인 청정 전력의 공급을 위해 전력망 현대화와 송전선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으며, 대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용량이 12배 증가했음.
- 청정에너지 증가의 파급 효과
 - 청정에너지 붐으로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가구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 하였음.

1) 「Investing in America」 아젠다는 초당적 인프라 법, CHIPS 및 과학법, 인플레이션감축법 등 핵심 입법을 바탕으로 미국 내 민간 투자를 증진하고, 해외로 이전했던 제조업의 리쇼어링과 국내 일자리 창출 및 소외지역 개발, 미국산 자재 및 부품의 사용 등을 추진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아젠다임(The White House. Investing in America).

▣ 향후 정책 방향

- 2030년까지 청정에너지 생산을 3배로 확대하고, 석유기업의 경제 영향력을 낮추고, 에너지 가격 변동을 줄임과 동시에 에너지 독립에 더욱 근접코자 함.
-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신속화하며, 국유지에서 청정에너지 개발을 더욱 확대
- 또한 송전선 업그레이드와 신규 송전망 투자, 전력망 구성품 제조에 대한 투자를 장려
- 청정에너지 및 기후 대응 연구개발 강화
 - 「ARPA-C」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Climate, 기후고등연구프로젝트)를 신설
 - HBCU(흑인대학), 히스패닉계 지원기관, 기타 소수민족 지원 기관과 제휴하여 「국립 기후 연구 및 혁신 연구소」 설립
 - NASA(미항공우주국), NOAA(해양대기청), National Science Foundation (국립과학재단) 등 기존 기관의 기후 연구 강화

“2030년까지 청정에너지 생산을 3배로 확대하고 에너지 가격 안정과 에너지 독립을 추구”

3. 청정에너지 확산과 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

▣ 현 행정부의 에너지 비용 절감 성과

-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생산 증가, 세액공제를 통한 가구 에너지 효율 개선 등으로 에너지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었음.
 - IRA로 단열재 설치, 창호 개선 등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과 지붕형 태양광 설치, 가정용 ESS, 냉난방용 히트 펌프 설치를 지원하며, 에너지 고효율 가전 구매 비용 환급,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등으로 실질적 에너지 비용을 보전
 - 자동차 연비 규제 강화로 연료비 및 유지관리비를 절감하여 자동차 1대 당 약 6천 달러의 절약 효과 추산
- 또한 전략비축유(SPR) 방출을 통해서 석유기업의 부당한 가격 인상에 대응하여 미국 유가를 안정시키고, 재생에너지와 화석에너지 간 비용 경쟁을 유도하여 에너지 가격 감소 추구

▣ 향후 정책 방향

- 청정에너지를 통한 더 다양한 에너지 선택지를 제공하고, 더 저렴한 에너지를 선택가능하게 함으로서 2030년까지 전기 요금을 전체적으로 9%, 가스 가격을 최대 13%까지 인하하고자 함.

4. 청정에너지 일자리 창출, 청정 조달 및 자국산 부품 활용

■ 현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일자리 창출 및 청정 조달 성과

- IRA를 통해 약 30만개의 직접적인 고용이 창출되었고, 엄격한 노동기준과 환경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또한 등록 견습생 고용과 통상 임금 지급 시 보너스 세액공제를 제공함.
 - 바이든 행정부는 청정에너지 산업을 포함하여 「등록 견습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백만 명 이상을 훈련하고 이 중 90%가 정규직 채용이 기대됨.
 - 또한 여성, 흑인, 소수 민족을 위해 STEM 교육 등에 투자를 늘려 소외계층에 청정에너지 및 제조 일자리 접근성을 높임.
- 세계에서 가장 큰 직접 구매자이자 인프라 재원 공급자인 연방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청정 조달 정책을 추진하였음.
 - 「Federal Buy Clean Initiative」(’22.9.15 발표)로 연방 정부가 구매하는 건축 자재의 98%를 차지하는 철강, 콘크리트, 아스팔트 및 평판 유리 품목에서 저배출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연방정부의 자금이 지원되는 프로젝트에 저탄소 건설 자재를 확대하기로 하였음.²⁾
 - 또한 IRA에 따라서 저배출 건설 자재와 제품을 지정하고 사용하기 위해 총무청, 교통부, 환경 보호청에 45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함.
- 인프라투자 및 일자리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IIJA, ’22.5.14 발효)에 미국산 자재 구매를 의무화하는 조항³⁾이 포함되었고, 연방 예산이 투입되는 인프라 사업 수행 시 철강, 제조품, 건축자재 등 세 가지 품목의 미국산 제품 사용을 의무화했음.⁴⁾

“연방정부의 구매력과 재정 동원 능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정 조달과 바이 아메리카 추진”

■ 향후 정책 방향

- 민주당은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의회 입법으로 정부 예산 지원으로 창출된 일자리의 엄격한 노동 기준 적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
- 또한 민주당이 전국 2만 명 이상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정에너지, 환경 보존 및 기후 회복력 프로젝트에 참여할 신규 인력 훈련 및 서비스 이니셔티브 「미국기후단」(American Climate Corps)을 출범시킨 바, 바이든 대통령은 이 2020년대 말까지 이 기후단을 세 배로 확대하는 목표를 수립하였고, 민주당은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2) The White House (2022.9.15.)

3) 대륙아주 (2023.3.3.)

4) 허난이(2023)

5. 차량 연비 규제 및 전기차 보급, 건물·산업 배출 규제, 메탄 규제

■ 현 행정부의 연비 개선·전기차 보급 및 건물·산업부문 배출 규제 성과

- 바이든 행정부는 2050년까지 수송부문 완전한 탈탄소화를 목표로 삼고, 해운, 도로 화물, 철도 및 항공, 대중교통 등 모든 수송 인프라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연비규제와 배출량 기준을 도입하였음.
 - 2024년 7월, NHTSA(미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은 승용차와 경형트럭의 모델연도 2031년 업계 평균 연비가 갤런당 약 50.4마일(mpg), HDPUV(대형 픽업트럭 및 밴)은 모델연도 2035년에 100마일 당 약 2.851갤런을 준수토록 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하였음.⁵⁾
 - 이것은 2027년~2031년 기간 승용차의 경우 매년 2%, 경형트럭의 경우 2029년~2031년 기간 매년 2%, HDPUV의 경우 2030년~2032년 기간 매년 10%, 2033년~2035년 기간 매년 8%의 연비 증가를 목표로 한 것임.
 - 2024년 3월, 미 환경보호청(EPA)은 2027년 모델연도부터 대형 차량의 배출량을 규제하는 제3단계 규제(「Greenhouse Gas Emissions Standards for Heavy-Duty Vehicles - Phase 3」⁶⁾를 최종 발표했음.
 - 배송용 트럭, 쓰레기 차, 공공 서비스 트럭, 대중교통, 셔틀버스, 트랙터 등 대형 차량이 규제 대상이며, 배송용 트럭 같은 대형 직업용 차량의 경우 모델연도 2032년에 대한 기존의 2단계(Phase 2) 배출 기준보다 최대 60% 강화된 것이며, 트랙터의 경우 최대 40% 강화된 것임.
- 또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로 전기차 판매가 4배 증가했으며, 2030년까지 미국 내 신차 판매의 전기차 비중 50%를 목표로 수립했음.
 - 또한 전기 스쿨버스 구매 보조금으로 경유 매연으로 인한 학생들의 호흡기 건강 우려도 개선하고 있음.
- 국공유지에서의 석유가스 시추 또는 채굴 로열티를 인상했으며, 시추 현장 정화나 폐유가스정 메탄 배출 처리를 위해 채굴기업이 매입해야 하는 채권 금액을 10배 이상 높였음.

“차량 연비규제를 강화하고 공공 부문 전기차 확대”

■ 향후 정책 방향

- 미국우정공사(USPS) 차량, 스쿨버스, 대중 노선버스, 연방 관용차량의 전기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 수송부문 활성화와 대중 교통 정비 및 확장에 예산을 2배 확대하고, 항만과 수로의 전기화를 가속화하고자 노력할 것임.

5) NHTSA.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6) EPA (2024.3.)

“청정철강, 청정 시멘트, 청정 알루미늄 등 난감축 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

- 또한, 건물부문과 중공업 부문 배출량 감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
 - 에너지 효율 건축 기준 도입을 위해 지방 및 주 정부를 지원하고, 2030년까지 모든 연방 건물 신축시 저탄소 자재와 청정 전력 사용을 의무화
 - 보훈병원, 연방정부 청사, K-12 공립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 건물을 업그레이드 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
 - 청정 철강, 청정시멘트, 청정 알루미늄 및 기타 제품 분야의 진전을 위해 중공업 부문의 투자 강화
- 청정에너지 진흥을 통해 석유산업의 에너지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떨어뜨리고, 수십억 불 규모의 석유 및 가스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고, 석유가스 기업의 초과이윤 추구로 인한 유가 급등 시 전략비축유를 방출⁷⁾하여 유가를 관리할 것임.
 - 또한 잠재적인 담합이나 이로 인한 폭리가 의심될 때는 석유가스 기업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것임.

6. 환경 정의⁸⁾

■ 현 행정부의 환경 정책 성과

- 「Justice 40 이니셔티브」를 통해 청정에너지 투자로 레거시 오염(legacy pollution⁹⁾) 정화와 피해 회복에 집중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2021년 1월 27일, 「국내외 기후 위기 해결에 관한 행정명령」(E.O. 14008)을 통해 「Justice 40 이니셔티브」를 주창
 - 동 이니셔티브는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청정 수송, 지속가능한 주택, 교육 및 인력 개발, 오염 정화, 청정 수자원 및 폐수 처리, 인프라 등에 대한 연방 투자의 40%를 오염 지역과 소외 지역에 투입하도록 목표를 설정¹⁰⁾
 - 자원 및 에너지 부문과 관련된 레거시 오염 문제에 관해서 미내무부는 미 전역에 수백만 명의 인구가 폐탄광, 폐유가스장에서 1마일 이내에 거주하며, 이로 인해 지하수 오염, 메탄 누출, 폐장비 방치로 인한 경관 훼손, 홍수 및 싱크홀 위험, 야생 동물 위협 등 공중 보건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¹¹⁾

7)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유가 급등이나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비축유를 방출하였는데, 코로나 대유행 시기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자 2021년 11월 방출을 결정하였고,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가 급등하자 2022년 3월, 전략비축유 방출을 결정함.

8) 민주당 정강에서 “환경 정의”에 관한 소절은 환경 오염에 의한 피해가 지역, 소득, 계층에 따라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게 영향을 끼쳐온 것을 개선하고자 산업 지역, 항만 인프라 인근 오염 개선 등에 초점을 둠.

9) 레거시 오염은 과거 특히 1940~50년대에 미국의 화학산업, 제조업, 자원 및 에너지, 군수 산업 등에서 사용되거나 생산된 중금속과 화학물질(납, 수은, PCB)의 잔여물 또는 이에 의한 오염을 일반적으로 칭하는데, 당시에는 이러한 오염 물질의 지속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에 대해 알지 못했고, 산업표준 또한 이에 맞추어져 있었음(Ellory Monks. 2022.1.26.).

10) The White House. Justice40.

11) U.S. Department of Interior. Legacy Pollution.

- 초당적인프라법에 의거 오염정화에 21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석유 개발 이후 버려진 폐유가스정 차단과 메탄 누출 방지에 투자¹²⁾
 - 초당적인프라법은 유산오염 정화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포함하며, 이중 160억 달러를 방치된 폐시추공 차단과 폐광산 오염정화 및 복구에 직접 지출됨.
- 「온실가스 감축 기금」(GHG Reduction Fund)의 일환으로 270억 달러 규모로 출범된 「국가 기금 네트워크」(National Funding network)를 통해 레거시 오염 피해 지역에 기후 및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자금 지원 강화¹³⁾
- IRA에 근거한 「청정포트(Clean Port)」 프로그램 추진으로 수송인프라 오염 정화 및 지역사회 경제 기회 확대
 - 「청정포트」 프로그램은 항구와 공항 주변의 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하고, 온실가스 무배출 시설 및 장비, 인프라 구축에 30억 달러를 지원하는 EPA의 프로그램임.
 - EPA는 동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①항구와 공항 시설의 완전한 무배출 운영으로의 전환 지원과 물류 전반의 혁신 촉진, ②항구 및 공항 인근 경유 오염 정화 및 독성 완화, ③ 지역사회 참여 및 배출감축 계획의 항만 산업 표준 관행화 지원을 표방¹⁴⁾
- 모든 연방기관이 행하는 일체의 정책 행위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환경 및 보건 영향을 고려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환경 정의 담당관' 임명을 의무화하는 「모든 이를 위한 환경 정의에 관한 국가적 약속 활성화 행정명령」(E.O. 14096)¹⁵⁾ 시행

“폐유가스정, 폐탄광의 오염을 정화하고, 청정 포트 프로그램으로 항구와 공항 인근의 오염을 개선하고 무배출 수송 인프라 추구”

■ 향후 추진 방향

- 현 행정부의 환경 정의 정책을 지속 추진
 - 특히 「모든 이를 위한 환경 정의에 관한 국가적 약속 활성화 행정명령」을 계속 이행하고 환경 정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입법 방안 모색
- 펜스라인 커뮤니티¹⁶⁾에 청정에너지 투자와 레거시 오염 정화 지속
 - 「Solar for All」과 같은 프로그램은 2029년까지 저소득 지역에 약 100만 개의 지붕형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 도모

“펜스라인 커뮤니티와 레거시 오염 정화를 통해 환경 정의를 추구”

12) *ibid.*

13) EPA (2024.8.16.)

14) EPA. Clean Port Program.

15) E.O. 14096 “Revitalizing Our Nation's Commitment to Environmental Justice for All.”

16) 펜스라인 커뮤니티(fenceline community)는 기업, 군사 기지, 산업 또는 서비스 센터에 바로 인접하여 소음, 악취, 화학물질 배출, 교통, 주차 등에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를 가리킴(Wikipedia). 많은 경우, 저소득층, 유색인종이 거주하며 오염원에 근접하여 보건적 위험을 겪고 있음(Law Insider).

- 과거 화석에너지 개발 지역이나 레거시 발전소¹⁷⁾ 운영 지역에 청정에너지와 청정 제조를 유치하기 위해 IRA의 보너스 세액 공제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공정 전환 유도

7. 기후 회복력 있는 커뮤니티 구축

▣ 현 행정부의 기후 회복력 강화 정책

○ 초당적인프라법과 IRA를 활용한 기후재난 대응 및 기후복원력 개선

- FEMA(연방재난관리청) 예산 증대, 산불 방재소방관 확대, 홍수에 대비한 도로, 교량 및 항구 신규 건설 등으로 기후재난에 준비 및 대응력 강화
- 화재에 취약한 공중 전선의 지중화로 전선 화재 및 추락 방지, 전력망 안정성 강화와 효율성 개선으로 기후 재난 시 정전 발생 위험 완화
- 습지 복원을 통해 해수면 상승과 태풍 영향 및 피해 완화
- 콜로라도 강 체계 안정화로 상수원 공급력 회복
- ‘회복 및 냉방 센터’ 등 공공 대피시설 투자, 이상 기후 시 근로자 보호 기준 도입

▣ 향후 추진 방향

○ 현 행정부의 기후 회복력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며, “재난 회복력 세액공제”(Disaster Resilience Tax Credit)¹⁸⁾를 추진

- “재난 회복력 세액 공제”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정과 중소기업이 폭풍, 더위,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그 피해를 완화하는 데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8. 글로벌 기후 리더십

▣ 현 행정부의 글로벌 기후정책 성과

○ 미국의 글로벌 기후 리더십 복원

- 바이든 대통령 임기 첫날에 파리협정 재가입 및 2050년 넷제로 목표 설정

17) 레거시 발전소는 일반적으로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한 오래된 발전설비를 말함. 과거에 건설되어 최근의 환경기준이나 효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온실가스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의 배출도 많음.

18) “재해 회복력 세액공제”에 대해 민주당 정강이나 현 행정부가 내린 공식적인 정의는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음. 그러나, 이상기후에 대비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 장려를 목표로 개인과 기업이 재해 회복력을 위한 건축 및 개조에 투자 시 세액공제를 제공하여 향후 관련 재해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짐작 가능함. 일례로, 2024년 4월, 민주당 Mike Thompson 하원의원(캘리포니아주)과 같은 주의 공화당 Doug LaMalfa 하원의원은 「재해회복성법안」을 공동발의 하였는데, 법안에는 재해 회복력 강화를 위한 여러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법안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개인 또는 기업이 재해위험 완화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30% 만큼을 세액공제하는 조항이 담겼음 (Congressman Doug LaMalfa. 2024.4.1.).

- 미국의 실질적 힘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와 타국가에 기후대응 노력 강화를 촉구하여 「글로벌 메탄서약」도출 주도
 - 글로벌 메탄서약은 2030년까지 글로벌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하자는 것으로 2021년 10월, 미국과 EU가 공동으로 발표한 후, 같은 해 11월 글래스고 COP26에서 우리나라를 포함 103개국이 서명에 참여하였음. 현재 155개국이 서명국으로 참여함.
-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11월에 열린 COP28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 2030년까지 글로벌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확대, 에너지 효율성 2배 개선 등의 의욕적인 문구가 결정문에 포함되도록 기후 논의를 주도
- 2023년 G7 청정에너지 경제 행동계획을 도출하여, 「청정에너지 공급망 파트너십」(Partnership for RISE; Resilient and Inclusive Supply-chain Enhancement) 출범에도 일조했음.¹⁹⁾

○ 글로벌 기후금융 조성 및 기후재원 목표 달성에 기여

- 바이든 행정부는 2024년까지 연간 110억 달러의 기후 자금 조성 및 글로벌 청정 에너지 시장 개발 지원을 약속
- 또한, 다른 국가들 특히 선진국들과 적극 협력하여 2022년에 1,000억 달러의 기후기금을 동원하기로 했던 파리 협정 목표액을 달성
 - ※ 파리협정 기후기금 목표는 2020년까지 1천억 달러를 조성하는 것으로, 엄격히 말해 이 목표액은 2020년까지 달성되지 못하였음. 그러나, 2024년 5월, OECD는 2022년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총 1,159억 달러의 기후기금이 조성된 것으로 집계하여 파리협정 당시 서약했던 목표액을 달성했다고 보고하였음.²⁰⁾

“미국의 리더십을 국제 기후협상과 개도국 기후대응에 적극 활용”

■ 향후 추진 방향

- 민주당은 미국이 글로벌 기후위기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며, 다른 국가들의 기후 행동 이행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는 신념을 견지함.
- 따라서 미국 내 청정에너지 개발과 미국의 리더십을 활용한 글로벌 혁신과 투자를 이끌고, 다른 국가들의 청정에너지 비용 절감을 돕고자 함.
 - 「PREPARE」(President’s Emergency Plan for Adaptation and Resilience; 적응과 회복을 위한 대통령 긴급계획) 이니셔티브 등에 예산 확대코자 함.
 - ※ PREPARE는 지구의 주요 지역에서 기후 영향에 대한 더 나은 글로벌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들이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됨.

19) The White House (2023.5.20.)

20) OECD (2024.5.29.)

- 미국의 리더십을 활용하여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고 청정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함.
- 미국의 리더십으로 글로벌 기후 대응에 국제 기후금융과 개발금융 시스템, 혁신적 금융수단을 적극 활용
 - 다자개발은행을 통해 세계 개발금융 시스템에서 기후 및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높일 것임.
 - 바베이도스, 가봉 등 개도국에서 총 20억 달러 이상의 부채를 구조 조정하여 수억 달러를 자연 및 기후에 투자할 수 있게 한 혁신적인 금융 기법인 「부채 대 자연 스왑」을 활용하고 확산하는 데에 미국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임.
 - ※ 「부채 대 자연 스왑」은 개발도상국의 부채 탕감을 대가로 채무자인 개도국 정부로부터 자연·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자발적 계약임.²¹⁾ 부채 탕감으로 인한 개도국의 재정 절감액은 자연·보호 프로젝트에 투자되게 됨. COP28에서는 개발 재원을 지원하는 다자개발은행(MDB)들이 「부채 대 자연 스왑」 확대를 위한 글로벌 태스크포스가 출범한 바 있음.

9. 민주당의 정강을 통해 본 해리슨 후보의 기후·에너지정책 시사점

▣ 현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자연적으로 승계

“해리슨의 기후·에너지 정책은 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승계”

- 해리슨 후보는 차기 대통령 후보이자,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현 행정부의 수반을 구성하는 핵심 주체인 부통령이므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분리될 수 없는 정책 기반을 가지고 있음.
- 또한 민주당 정강은 현 바이든 행정부와 차기 행정부의 정책을 아우르는 실적보고서이자 청사진의 역할을 하며, 해리슨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후보이므로 현 시점에서 민주당 정강을 해리슨 후보의 공약이라고 간주하여도 무리는 없음.
- 한편 IRA에 따른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나 연방 프로그램 등 현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에너지 핵심 정책들은 현재 진행형일 뿐만 아니라 이미 차기 행정부 집권 시기 까지도 포함하는 정책 시계(時界)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임.
 - ※ IRA, 초당적 인프라법 등은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진흥 정책의 법적 근거와 예산 지출 등을 규정하고 있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에 관심이 많음. 단, 법의 개정·폐지 등은 의회의 권한으로 대선과 함께 치러질 상·하원 선거 결과에 따른 영향을 더 받게 될 것임. 또한,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따라서, 해리슨 후보의 기후·에너지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본질적으로 크게 차별화되지 않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사실상 거의 대부분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며, 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유지·확대할 것임을 정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21) UNDP. Debt for nature swaps.

- 나아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성과는 해리슨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이룬 성과로 포장될 수 있음.

■ 해리슨 후보의 기후·에너지정책 주요 내용과 평가

- 미국 내 에너지 생산의 확대, 에너지 독립, 에너지 가격 안정의 핵심 수단으로서 청정에너지 생산과 보급 확대, 전력망 확충, 청정에너지 제조업 투자,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추구하며, 특히 유권자에게 소구(訴求)할 수 있는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강조
 -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국유지 청정 에너지 개발을 확대
 - 전력망 신규 확충과 업그레이드, 전력망 구성품 제조 투자,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투자 확대
 -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전력 비용 절감을 도모하며,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가정용 태양광 설치, 고효율 가전 구매, 전기차 구입 등에 IRA 세액공제를 지원하여 비용 지출을 보전하고, 자동차 연비 규제 강화로 연료비 등 절약
 - 그러나 석유기업의 초과이윤 추구 행위로 인한 유가 급등에는 전략비축유 방출 등으로 관리
 - 청정에너지 제조업 투자 확대를 통한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미국 기후단 확대 등으로 청년 고용 강화
 - 오염지역에의 청정에너지 투자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 수송·건물·산업 부문의 탈탄소화
 - 차량 연비 기준 강화, 공공부문 전기차 보급 확대, 공공 건물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철강·시멘트 등 난감축 제조업 부문의 탈탄소화를 지원
- 청정조달, 미국산 부품 의무 구매
 - 연방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한 청정조달 확대와 연방정부 재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의 미국산 부품 구매 의무화 지속
- 석유가스 개발 규제 강화 및 석유산업 영향력 약화
 - 국공유지 시추 또는 채굴 로열티 인상, 시추 현장 정화나 폐유가스정 메탄 배출 규제 등을 지속하고, 개발 석유 및 가스기업에 대한 보조금 삭감, 부당한 초과이윤 추구 행위 근절을 위해 법적 대응 추진
- 환경 정의 추구
 - 레저시 오염 지역, 펜스라인 커뮤니티, 과거 석유가스 개발 지역이나 탄광 지역, 화력발전소 인근 지역, 항구 및 공항 등 인프라 오염지역에의 오염 정화 및

“청정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 일자리 창출, 오염지역 정화와 소외지역 활성화 등으로 유권자에게 소구 노력”

청정에너지 투자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에너지 인프라 및 제도 강화
 - 가공전선 지중화, 전력망 안정성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재난 회복력 세액공제' 입법 추진
- 미국의 글로벌 기후 리더십 지속 강화
 - 기후협상, 에너지 및 기후 관련 다자협력체 등의 기후정책 논의를 계속해서 주도하고, 글로벌 기후금융 및 다자개발금융에의 영향력 행사, 혁신적 금융 기법 등을 동원하여 개도국 기후 대응에도 적극 나설 것

참고문헌

- 대륙아주. 2023.3.3.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관련 정책 제2회 -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 법률신문.
- 허난이. 2023. 바이 아메리카법 무엇이 달라졌나?. 「통하는 세상 통상」. 2023년 11월호. Vol.138.
- Congressman Doug LaMalfa. 2024.4.1. Reps. LaMalfa, Thompson Introduce Disaster Resiliency Legislation to Mitigate California Insurance Crisis. Press Release. (<https://lamalfa.house.gov/media-center/press-releases/ reps-lamalfa-thompson-introduce-disaster-resiliency-legislation>, 최종접속일: 2024.9.1.)
- Ellory Monks. 2022.1.26. Legacy Pollution & IJJA, (<https://the-atlas.com/iija-handbook-for-local-governments/legacy-pollution/>, 최종접속일: 2024.8.25.)
- E.O. 14096 "Revitalizing Our Nation's Commitment to Environmental Justice for All.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3/04/26/2023-08955/revitalizing-our-nations-commitment-to-environmental-justice-for-all>, 최종접속일: 2024.8.28.)
- EPA. Clean Port Program. <https://www.epa.gov/ports-initiative/cleanports>, 최종접속일: 2024.8.29.)
- _____. 2024.8.16. EPA Awards \$27B in Greenhouse Gas Reduction Fund Grants to Accelerate Clean Energy Solutions, Combat the Climate Crisis, and Save Families Money.
- _____. 2024.3. Final Standard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Heavy-Duty Vehicles for Model Year 2027 and Beyond.
- IMF. Online Annex 5. Debt-for-Nature Swap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Regional Economic Outlook - Western Hemisphere. 2023. 10.13.. <https://imf.org/-/media/Files/Publications/REO/WHD/2023/October/English/onlineannex-5-en.ashx>

- Law Insider. fenceline community definition. (<https://www.lawinsider.com/dictionary/fenceline-community>, 최종접속일: 2024.9.1.)
- NHTSA.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https://www.nhtsa.gov/laws-regulations/corporate-average-fuel-economy>, 최종접속일: 2024.8.29.)
- OECD. 2024.5.29. Developed countries materially surpassed their USD 100 billion climate finance commitment in 2022.
- The White House. Investing in America. (<https://www.whitehouse.gov/invest>, 최종접속일: 2024.8.23.)
- ____. Justice40. (<https://www.whitehouse.gov/environmentaljustice/justice40/>, 최종접속일: 2024.8.25.)
- ____. 2023.5.20. G7 Clean Energy Economy Action Plan.
- ____. 2022.9.15. FACT SHEET: Biden-Harris Administration Announces New Buy Clean Actions to Ensure American Manufacturing Leads in the 21st Century.
- UNDP. Debt for nature swaps. (<https://sdgfinance.undp.org/sdg-tools/debt-nature-swaps>, 최종접속일: 2024.8.29.)
- U.S. Department of Interior. Legacy Pollution. <https://www.doi.gov/priorities/investing-americas-infrastructure/legacy-pollution>, 최종접속일: 2024. 8.28)
- Wikipedia. (검색어: fenceline community, 최종접속일: 2024.9.1.)